

## 남북문화교류는 장기적 체제통합, 인간통합과정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culture | art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화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일상화된 교류로 사회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때 지금까지의 문화교류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상호이해 증진과 성찰적 점검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문화교류의 의미

분단 이후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적 이념으로도 그러하지만 서로 다른 체제를 발전시켜 오면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남북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는데 있기보다는 대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이념과 체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은 커녕 상호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70년대 7·4공동성명 이후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교류도 점차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변수가 문화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남한사회 내부의 민주화도 광의의 문화교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대두된 북한바로알기 운동은 반공주의를 기본적인 토대로 권위주의 정권비판의 다른 표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동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정치이념 일색이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사람과 사회, 그리고 문화라는 차원으로 다양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문화교류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화의 진전과 문화교류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교류는 경제교류나 정치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교류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교류는 다른 교류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와 이념의 수준에서 통일은 문자 그대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지만 문화체제의 차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통일은 정치적 통일과 달리 단일한 체제가 되기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대두된 북한바로알기 운동은 반공주의를 기본적인 토대로 권위주의 정권비판의 다른 표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 확대를 동반하였다.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문화교류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민주화의 진전과 문화교류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 Be Concerned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는 교류인 동시에 통합의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는 개별적인 사업(예를 들어 특정 가수의 평양 공연)이 되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교류를 위한 환경조성(문화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가 확대되면 경제교류도 촉진)의 역할도 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남북한 체제통합, 그리고 인간통합의 과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 비하면 남북한 문화교류가 일상화되어 사회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까지의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이벤트성의 교류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진정으로 상호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문화교류를 성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문화교류의 특징

7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남북 접촉이 확대되면서 문화교류도 점진적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비정기적이긴 했지만 문화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양이나 내용면에서 정상회담 이후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 시기의 문화교류들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간 교류의 추진과정에서도 정부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 입장과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류사안들은 성사되기 어려웠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화교류가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냉전체제에 종속됨으로써 주변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셋째, 왕래교류보다는 제3국에서의 교류가 많았다. 성사된 대부분의 남북한 교류가 대부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제3국의 중개에 의하거나 교포들의 중개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적었다. 따라서 문화교류도 제3국에서 개최되는 관련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국 베이징과 조선족 교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연변지역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총련과 민단이 있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넷째, 대부분의 교류가 일회적이었다. 1985년도 고향방문단과 더불어 이루어진 예술단 교류도 한번에 그쳤으며, 남북간 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문화교류도 마찬가지로였다.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산가족의 상봉이 1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극적인 상봉은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현주

소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개성공단 등 경험의 분위기도 점차 고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8·15를 기념하는 음악회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참여하여 단독공연과 KBS교향악단과의 합동공연을 남한주민들에게 선사하였다. 또한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KBS는 백두산 현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생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삼성의 탁구단은 평양에서 시합을 하였고, 시합장면은 생중계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올림픽에 공동입장을 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비교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을 방문하는 문화교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교적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였던 1990년대 초나 김대중 정권수립 이후에도 문화교류의 장소는 제3국이나 북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의 문화교류는 남한측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한 것이 중심이었다. 북쪽 사람들이 남한을 방문하여 공연을 한 것은 1985년도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할 당시 동반하였던 예술단 공연 이래로 한번도 없었다.

이것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남한의 문화를 북한인민들에게 선보이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동안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형식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보면 문화교류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북한 문화에 남한을 수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가 문화교류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외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진 소년예술단과 교예단의 방한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는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셋째, 자본의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장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평양교예단이나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지난해의 정상회담 평양공연 등의 행사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사례비가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나 이번 문화교류의 경우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넷째, 제3국이 아닌 남북한 현지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문화교류의 중심은 남북한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남한(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평양교향악단)과 북한(탁구시합 백두산 현지방송)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곳에서 교류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다. 제3국의 문화교류는 참여자에 국한된 교류지만, 현지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비록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남북의 문화를 상대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류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방송과 언론이 결합되는 등 문화교류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결합은 근본적으로 문화교류의 경험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연이나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보도 혹은 중계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의 교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화교류의 성과를 확대시켰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화교류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소년예술단, 교예단, 교향악단, 방송 그리고 체육에 이르기까지 정상회담을 전후한 각종 문화교류는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교류의 중심지가 남한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접하지 못하였던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

정상회담을 통하여 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화교류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교류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 Culture

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남북 문화교류의 한계

정상회담을 통하여 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교류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교류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문화교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정치에의 예측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최근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정상회담의 개최와 합의문 도출이라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 결국 논리적으로 본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점이다. 문화교류가 남북관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남북관계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비롯된 만큼 문화교류에서도 정부의 몫이 확대되어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남북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의 자발성을 강조한다면 남북문화교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국가가 개입하는 문화교류는 결과적으로 문화교류를 정치적 흥

보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문화교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문화교류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문화교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교류에서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료나 공연료 등의 사례는 어느 공연이나 필요한 지출이 될 것이나, 적절한 가격과 동떨어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인데 그 하나는 문화교류마저 대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앞으로 문화교류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상품성 있는 문화만이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분단 상황으로 상대 문화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이 경험한 분단은 단순히 둘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남북한 사람의 만남은 곧 위법이었고, 당연히 상대 문화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보안법 위반이었고, 이는 반 국가사범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커녕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문화적 적개심을 유지한 채로 갑자기 상대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호기심 충족의 수준에 머무르거나, 과거의 문화적 편견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보면서 북한 독재체제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거리감 인간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바람직한 문화교류를 위하여

문화교류가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교류가 통일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역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화교류가 갖고 있는 바람직한 요소들을 확대하면서 문화교류과정에서 과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노력은 남북한이 같이 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남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첫째, 이미 이루어진 문화교류를 통하여 북한문화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문화는 본질적으로 남한문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문화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남한사람들의 문화적 배타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며 이와 더불어 남한은 다원주의화의 진전, 세대간의 의식차이의 확대 등으로 문화적 취향이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도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문화교류 과정에서 북한문화의 수용태도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들만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북한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북한문화는 남한문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까닭에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에 앞서 일방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왔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직접 북한의 문화예술을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문화예술을 접하게 되면 반복하여 강조된 비판적 시각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북한문화예술에 일방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수용의 여부를 전문가가 판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면,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판단도 일반 문화수용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동안 왜곡된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비판,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무지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해소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

하여야 한다. 정부를 포함한 정치적 집단의 문화예술교류는 어떠한 경우거나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문화예술의 경우 근본적으로 갖기 마련인 정치성과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북 문화예술교류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류의 기본목적 즉, 문화예술의 교환을 통한 상호이해증진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문화예술교류를 '탈 정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잡한 남한의 정치적 지형상 남북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정부가 문화교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써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안법을 포함하여 현재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은 근본적으로 북한문화 수용을 막고 있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종 문화교류나 북한문화의 도입은 대부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규정(외국문화로 볼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보안법·저작권 등 관련 법령, 수용의 절차 및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정비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정비 작업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교류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문화적 병폐중 하나인 지나친 상업주의는 북한문화에서도 소위 팔릴만한 것들만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에서 상품성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공신력 있고 전문적인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협력기금을 문화예술교류에 일정부분 활용하는 동시에, 문화관련 각종 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